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2월 27일(월) 총 4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 당 자	•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440-3481 • 담당자 곽초롱 ☎440-34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재외동포 염원 담아 재외동포청 유치에 총력

- 재외동포청 신설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포 3개월 후 시행 -
- 인천, 재외동포 선호 도시, 재외동포 뿌리 도시, 재외동포 친화적 국제도시 -
- 유 시장, “인천이 최적지, 시민사회·재외동포 염원 담아 반드시 유치” -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300만 시민과 730만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정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도 이에 맞춰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에 박

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소식을 접한 뒤 지난해 9월 호주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광폭 행보를 이어 왔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렸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외교부 장관, 국회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유럽 한인총연합회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하와이 재미교포단체 등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고, 이들 재외동포들로부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천시는 인천이 재외동포청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먼저, 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유럽, 중앙아시아, 하와이 등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방문이 쉽고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 뿌리이자 동반자인 도시다.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이민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만큼 인천은 이와 관련한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20년 전 재외동포를 배웅했던 인천에 재외동포를 맞이하고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상징

성이 부각 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들이 삶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모국에 대한 애정과 기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친화적인 국제도시이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송도아메리칸타운, 글로벌캠퍼스 등 재외동포를 위한 우수한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국에서의 경제활동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치된다면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인천시 발전, 국가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과 함께 재외동포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시책 추진으로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친화적인 경제·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를 창출해 인천시는 물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도 계속 모아지고 있다. 시민회원 21만 명을 보유한 인천시총연합회 등 지역사회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지지 결의를 통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시는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시민 홍보활동과 시민사회 지지 결집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으로 재외동포청 유치가 결정되면 차질 없는 설치와 출범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 기구는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편의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천에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이 재외동포청의 유일무이한 최적지라 생각한다”며, “인천 시민사회와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이 300만 시민을 넘어 730만 재외동포까지 포용하는 인구 1000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